2023 GCTF 워크숍 참석 결과 보고

2023. 6.

국민권익위원회

Ⅰ. 워크숍 개요

❑ 워크숍명 : 2023 GCTF(Globol Cooperation and Training Framework) Workshop on Multi-Stakeholder Engagement in Anti-Corruption

❑ 개최일시 및 장소 : 2023.6.13.(화) ~ 6.14.(수), 대만 하얏트호텔

❑ 주관기관 : 대만 외교부, 법무부

❑ 참석자 : 대만,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15개국 공무원, 전문가, 학자 및 NGO 회원 등 200여명

※ 한국 참가자 : 국민권익위원회 장차철, 윤정범

Ⅱ. 워크숍 일정

일자	프로그램	비 고
6.13. 오전	오프닝행사, 개회사	
	[세션 1] 민관, NGO, 학계, 시민사회 등 반부패 시스템 다그룹 협동방안	
6.13. 오후	[세션 2] 상호법적 공조를 통한 국제 반부패 법률 강화 방안	
저녁	외교부 만찬	
6.14. 오전	[세션 3] 뇌물범죄 방지 반부패 활동	
6.14. 오후	[세션 4] 부패 척결을 위한 기술 활용	

Ⅲ. 워크숍 내용 요지

▶ 다양한 그룹이 전문적인 관점에서 반부패동맹 간 협력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방안을 토론,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세계질서를 재건하기 위한 새로운 반부패 역량 투입에 대해 논의

▶ 4개의 세션 (분야별 전문가 패널 및 발표자 참여)
① 돈세탁, 뇌물 및 부패수익금 몰수를 통한 부패척결, ② 개방형 정부를 통한 부패요인 감소, ③ 부패척결을 위한 법집행 기관의 기술활용, ④ 부패척결을 위한 젊은 세대 참여
※ 한국 참가 세션은 ①, ③

○ 당면한 부패 양태의 부단한 진화, 정부 정보의 공개 중요성, 신뢰가치 중요성을 강조

○ 국제 반부패 법 집행 및 상호 사법 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논의, “자금 세탁 방지 및 뇌물 수수 및 횡령 수익금 몰수를 통한 부패 퇴치”, “법 집행 기관의 기술능력을 이용한 부패 방지” 등 중요의제에 대해 광범위한 토론

○ 각국의 실무경험과 당면한 도전, 새로운 과학기술 활용과 국가 간 부패범죄, 돈세탁, 범죄은닉 수법 등 다양한 사례 공유

Ⅳ. 워크숍 세션별 내용

❑ 개회사 개요

(대만 법무부 장관 Ching-Hsiang Tsai) 대만은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원칙과 기업의 청렴성을 지켜 개방적이고 투명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018년 이후 CPI 부패인식지수 31위에서 지속적인 향상으로 2020, 2021년 25위까지 상승, 대만은 유엔 회원국이 아님에도 유엔이 채택한 부패방지협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번 GCTF와 같은 워크숍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워크숍을 통해 부패와 싸우는 전문역량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각자의 강점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

(호주 대만 대표부 Jenny Bloomfield) 부패는 불안정과 빈곤을 유발하며, 국가실패를 이끄는 지배적인 요인이며, 가난과 질병에 대한 노력도 약화시킬 수 있음. 디지털 세계에서의 공적자금의 잘못된 관리, 뇌물수수, 세금 사기, 불투명한 로비관행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과 민간 부문이 함께 효과적인 조치를 위해 협력해야 함. 호주는 반부패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작년 11월에 호주 의회는 부패방지위원회 법을 통과시켰고, 올해 7월부터 운영 시작 예정임. 대만과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 가치를 공유하는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가고 있음.

(캐나다 대만 무역사무소 Ed Jager) 부패는 사회적 결속에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함. 선택된 소수가 다수를 희생시키며 불평등과 빈곤을 악화시키고, 의료, 교육, 인프라 지원에 있어서 공적자금을 잘못 전용되도록 하는 등 부패는 공정성과 정의의 원칙을 훼손함. 워크숍을 통해 이러한 여러 가지 교훈을 배우고 캐나다의 반부패 노력을 공유하기를 바람.

❑ 세션별 주요 발표 개요

○ Delia Ferreira Rubio (국제투명성기구 의장, 영상)

국가는 부패와 관련된 신고, 이해상충, 정보공개 등과 관련하여 엄격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자원들은 민간부분에서 사용되므로, 민간부문에서의 윤리행동 강령도 중요하며, 민간의 윤리나 이의 준수, 투명성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특히 민간부문에서의 일부 분야는 부패측면에서 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이러한 분야에서 법조인,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법치주의를 방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함. 시민사회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합의를 재건해야 함. 정치인들에게 투명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기만 하고 그들이 잘못을 했음에도 유권자로서 투표를 해준다면 모순이며, 부패행위자들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장려하는 것일 수 있음.

시민사회에서는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교육해야 함. 성인이 된 이후에 대중에게 공공부분의 청렴강령이 있고, 정직해야 하고 공공자원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늦음. 국가는 부패를 막기 위해 사법부, 검찰 등의 독립과 권한보장을 해야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등을 위해 민간부문과 국가 모두 공조해야 함. 전통적인 이러한 방식으로 부패와 싸울 수 있지만, 새로운 양상의 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기존방식과 더불어 새로운 반부패 정책들도 모색해야 함

○ Manpreet Singh Anand (미국 국제민주협회 지역본부장)

NDI(National Democratic Institute)는 1983년에 설립되어 40주년임. 민주주의를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임무인 비정부기관임. 40년동안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파트너십을 가짐. 특정한 정치적 결과를 옹호하지 않으며 민주적 과정과 그 근본적인 원칙을 지지함. NDI의 접근법은 투명성, 정부개방, 의회개방, 그리고 젊은세대의 역할 확대 등임. 하지만 오늘날의 세계는 부패양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불투명

해지는 특성이 있으며, 지역의 민주주의와 절차들을 전복시키는 것을 종종 목격하고 있음. 독재자와 독재성향의 지도자들은 기존의 제도를 부식시키고 민주적인 야당을 탄압하고 국내의 시스템을 훼손하고 공공자원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음. 선출된 대표가 정부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패와 싸워야 함. 반부패를 민주주의의 핵심 축으로 포함시키고 광범위한 국제적 노력을 이루어 나가야 함. 부패를 척결하고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는 대만의 노력은 입증되어지고 있음. 다양한 분야의 반부패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민들이 정부와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러한 권한이 실제로 있을 때 가능함. 마지막으로 젊은세대들을 이러한 노력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함. 젊은세대가 종종 반부패 및 개방적인 정부 이니셔티브에서 소외되거나, 주요 정책 입안자들의 의사결정 및 상호작용에 의미있게 포함되지 않고 있음. 젊은 세대는 정치적인 참여와 역량을 개발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 제공이 중요하며, 이러한 참여 기회 제공이 복잡한 거버넌스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임.

○ SImon Lsliberte (캐나다 몬트리올시 감사관실)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몬트리올시 감사관실의 주요 업무는 공공계약과 관련된 사기적인 계획들을 예방, 탐지, 저지하는 것임. 주요 권한의 근거는 형법이나 몰수법 등이 아닌 행정법에 기인하며, 시정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감사관의 임명은 지방의회의 과반수이상 표결에 의함. 지방정부인 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감사관은 시의회에만 활동을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관실의 예산도 삭감되지 않도록 시 예산의 일정 고정비율로 정해져 있음. 과거에는 이러한 예산의 독립이 훼손되고 삭감되는 다른 지역의 사례도 목격하였음. 몬트리올 감사관실은 또한 선의로 행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기소 면제가 보장됨. 감시를 받는 기업들이 우리를 고소하려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소면제 제도를 통해 독립성이 보장됨. 또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공공계약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대한 조사수단을 보장받고 있음. 주요한 수단으로 시 직원, 선출직 공무원, 계약자 등은 우리의 조사에 전

적으로 협조하고 정한 날짜에 출석한 의무가 있으며, 사업체를 점검하거나 관련 정보를 얻을 권한이 있음.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형사사건과 달리 조사관들이 특정기준을 준수하고 올바르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하고 있음. 또한 주요 수단 중 하나는 입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요청권한임. 이러한 권한을 활용하여 2014년 이후부터 지난 9년 동안 30개 이상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권고사항과 결과보고 등 활동을 하였음. 예를 들면 몬트리올 쓰레기 재활용 업체, 도서관 건설업체의 리베이트와 관련된 활동등이 있음.

❍ Keh-Her Shih (대만 국가발전위원회 위원)

대만국가발전위원회는 공공부채와 관련하여 외국의 반자유주의적 영향력과 관련된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성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국가 행동계획 약속을 시범운영하기 시작했음. 또한 해외 비밀정치자금과 부채 투명성이라는 주제로 연구와 워크숍 등을 개최하기 위해 국제투명성기구와 협력하고 있음. 대만의 반부패 정책 성취는 2022년 국가청렴지수 25위, 뇌물위험지수 22위 등임. 개방성과 투명성을 위해 대만에서 노력을 기울인 핵심분야는 정부개방임. 개방정책을 채택할 때 공공자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해야 함.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는 2011년 설립되어 105개 지방정부, 75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2021년에 대만은 Open Government National Action Plan을 수립하였음. 국가개방 정책의 핵심가치는 주체별 정보수집의 간극을 줄이고, 공공과 민간의 상호신뢰를 향상시키고, 외부감시 견제를 위한 부담경감, 자유로운 의견개진 등임.

❍ Rong-Sung Chuang (대만 법무부 염정서장)

이 세미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들을 공유하고자 함. 우리는 사기범의 컴퓨터에서 많은 사기단의 사기방법과 그의 범죄소득, 범죄증거와 모략에 대한 자료를 발견했음. 우리는 그때 구글 클라우드나, 다른 클라우드에서 직접 이 전자파일을 다운받음. 이 파일들은 사실 실체적인 직접자

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고 나서 3년 후에 우리 동료들이 법정에 소환됨. 피고인 폭력배들은 법 집행 기관에서 다운로드한 모든 자료를 부인했음. 대만에서는 올해부터 소위 국민판사라고 불리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클라우드 파일 등의 증거능력 때문에 범죄 현장에서 어떻게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 제일 먼저 고민해야 함.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신중한 디지털 체인이라는 개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집행관이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백업)한 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 등이 고민되어야 함. 그래서 우리는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사법기관의 법적 메커니즘을 강화함. 집행관 등에 대한 교육 훈련과 기술 조작이 서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구체적으로 파일을 열어 제가 오늘 다운로드한 클라우드 콘텐츠에 대해 어떤 계정 암호를 기록하고, 자동화된 스크린샷과 지능형 처리를 통해 많은 법 집행자들이 일선에서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업무를 간소화 할 수 있음.

❍ Christopher Woods (호주 연방경찰국, AFP)

AFP는 사기 및 부패, 외국 뇌물 수사, 전략 및 정책 및 이 분야에서 다른 호주 사법기관 및 호주정부와 협력함. AFP와 호주 사법부의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의견과 몇 가지 사례 연구 등에 대해 견해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음. 첫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돈세탁 영역에서, AFP는 최근 호주 커뮤니티에 비용을 지불하는 악의적인 범죄를 다루기 위해 올해 새로운 태스크 포스를 출범시켰음. 매주 수천만 달러의 돈세탁에 관련된 사람들이 우리 경제를 이용하고 있으며, 세금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함으로써 발생할 호주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작용이 있음. 호주에서 나라 밖으로 나가는 범죄 수익에 대응하여, AFP는 다른 연방정부 부서들과 협력하여 이 특별 조사단을 발족시켰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많은 사례 연구를 진행할 시간이 없지만 저는 사례 연구를 가지고 있고 공유할 수 있는 링크를 가지고 있음. AFP 외부 웹사이트에 자료 확인이 가능함. 호주 경제의 취약성을 이용하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용해온 사례 연구의 일부와 유형 및 방법론을 개략적으로 설명함. 일부 발표자료를 통해 올해 초 태스크포스가 시작된 이래로 탐지된 기술과 방법의 일부를 볼 수 있을 것임. 그리고 부패와 국외 뇌물 자금과의 연관성도 확인가능함. 특정 범죄 분야의 책임자로서 부패 범죄와 관련된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높은 정보 수집 우선순위입니다.

특히 상품과 돈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부패한 정부 관리들에 주목하게 되었음. 사례로는 이라크 공무원에게 송금되는 자금과 관련된 문제였으며, 이것은 AFP에서 조기 발견 정보가 우리에게 범죄를 보고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임. 범죄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경찰 기술과 비밀 방법론을 사용하여 범죄를 탐지할 수 있도록 관여함. 호주의 사기 및 부패 수사에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조달 또는 정부 기관에서 부패를 탐지한 직원이 법 집행 기관에 늦게 통보하는 것임. 조사가 늦어지면 그동안 디지털 기기에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모든 증거가 파기되기 때문임.

제가 언급하고 싶은 중요한 것은 국가 부패방지위원회라는 기관이 호주에서 7월 1일에 운영을 시작함. 본질적으로 이 새로운 기관은 호주 연방 형법의 부패 정의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함. 그리고 호주는 연방정부에 대한 사기나 연방정부와 관련하여 속임수로 이익을 얻는 움직임에 대해 부패 방지 대책을 세워나갈 것임. 호주 정부의 기관과 호주 정부와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이 새로운 기관의 관할 하에 있게 될 것이며, 그러나 이 새로운 기관은 아직은 적은 수의 인력으로 인해 연간 소수의 사건 수행능력만을 가질 것임. 그래서 AFP는 출범 영향에 대비하고 지원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또한 호주는 자금 세탁에 대항하는 테러 자금 조달 영역에 대하여 공개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은행 및 보험 및 시장의 기타 금융 기관이 금융정보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서 추적가능한 방향으로 정책이 논의되고 있음. 돈세탁 방지법과 관련하여 회계사, 변호사, 신탁사, 회사 서비스 제공자, 부동산 중개인, 귀금속 판매업자와 보석상들이 규제의 대상이 될 것임. 발표자료에는 없지만 우리는 범죄 자산 몰수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고, 그것은 10년 동안 운영되어 왔고, 매우 성공적이었음.

❍ Andrew Sprake (영국 국죄범죄 연락사무소)

부패와 관련된 영국의 주요 법안은 뇌물죄임. 영국은 자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업과 조직을 기소할 수 있는 강력한 뇌물죄 법안을 가지고 있음. 범죄 수익 몰수와 관련된 법안, 부패와 관련된 자금의 반환 및 원상복구에 관한 법안이 그것임. 법안들은 우리가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로 인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줌.

범죄 유죄 판결의 경우 그 자금이 범죄 수익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더 쉽지만, 범죄 유죄 판결이 없을 때는 우리 정부가 자금을 그 관할 구역으로 반환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려움. 유죄 판결에서 자금 반환까지 8년이 걸린 마카오 사례에서 나온 핵심적인 학습 포인트는 법 집행 기관과 검사들이 가능한 한 빨리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며, 국제적인 법 집행 기관들 간의 초기 협력이 상호 법률지원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임.

특히 부패 수익금을 반환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도 부패가 진행 중인 지역에 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영국의 관점에서 보면, 2017년에 케냐와 브리티우스와 관련된 사례에서 우리는 약 40만 파운드를 부패관련 자금을 회수하였고 막대한 금액은 아니지만, 인도주의적 프로젝트를 통해 자금을 반환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음. 그 사례에서 영국 정부는 기금 반환의 일부로 그 지역 앰뷸런스를 구입하여 케냐 당국에 제공함. 일반적으로 불법과 관련한 자금 반환을 위한 MOU 또는 합의가 시행되고 있음. 이것은 책임과 투명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함.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자금을 돌려줄 때 부패의 수익이 부패하지 않은 영역으로 반환되어야 하기 때문임.

영국은 부패범죄 관련 자산 복구 세부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여 누구나 로그온하여 상호 법률 지원 요소를 포함한 전체 자산 복구 세부 정보를 찾을 수 있음. 몇 가지 사례 연구를 살펴보겠음. 첫 번째는 세계적인 광산 회사 클렌코어 사례임. 수사 초기에 글렌코어에서 많은 범죄와 정교한 은폐 방법이 있었음. 뇌물이 서아프리카에서 사업을 하는 방법이라는 것

은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졌고, 글렌코어 경영진들은 스위스에서 수십만 달러의 항공기를 구입하고, 경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로 가서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지불함. 대부분의 경우 남수단 사무실 사업비 등으로 묘사되었지만, 뇌물의 일부를 담당한 사람조차 실제로 런던 사무실의 비즈니스 윤리 위원회의 책임자였음. 영국은 조사하는 동안 글렌코어가 지불한 뇌물이 약 2,900만 파운드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혀냈고 사건은 결국 지난해 11월 7건의 기업 고발로 귀결되었음. 판사는 글렌코어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되는 모든 이익을 몰수하고 조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당한 재정적 벌금을 명령하여, 총 1억 8천 3백만 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됨. 추가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심각한 사기뇌물 범죄에 대해 영국에서 이 조사를 주도했지만 영국은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많이 협력했다는 것임. 네덜란드, 스위스 당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함.

두 번째는 대만과 관련된 사례임. 2021년 런던의 부동산 구매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서를 받았고, 이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대만 용의자의 아내라는 것이 명백해졌음. 그래서 우리는 영국의 관점에서 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될 자산이 그들의 부패와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았고 그 시점에서 대만 검찰에 통보했음. 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 자금이 싱가포르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확인했고, 따라서 대만 당국에 제공할 수 있는 추가 싱가포르 은행 계좌와 자산이 있었음. 그리고 2022년 4월에 모든 자금이 영국에서 압류되었고, 그래서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여러 요청서를 통해 대만인들에게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음. 올해 5월 대만 당국은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소재를 파악했으며 현재는 체포됨.

이 두 사건 모두 부패와 범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세계적인 문제이며 개인과 기업체에 속하는 기금과 자산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줌. 탐욕은 부패한 개인들의 주요 동기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자산을 빼앗아 가능한 한 관할권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부패를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임.

❍ Pei-Ju Wang (대만 법무부 국제부 검사)

불법적인 자산 회수에 대한 대만의 경험을 조금 공유하고자 함. 80년대 대만과 프랑스 간의 호위함 조달사업에서 시작됨. 국영 프랑스 회사가 대만 해군 납품과 관련하여 일부 정부 관리들과 중개인에게 뇌물과 리베이트를 지불함. 총 계약 금액은 28억 달러로, 부패한 조달과 불법 리베이트는 대만과 프랑스에서 발생한 14명의 의심스러운 죽음과도 관련이 있음. 수사 과정에서 핵심 인물인 앤드류 왕이라는 대만 브로커가 나중에 2천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그는 2001년에 곧 대만을 탈출했고, 그의 가족들의 이름으로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것이 발견됨. 몰수법 개정 이전에는 몰수가 일종의 솜방망이 처벌로 여겨졌으며, 유죄판결을 받거나 금고형 등 본형을 선고받아야만 범죄수익금을 몰수할 수 있었음. 2015년 범인의 죽음으로 인해 유죄 판결이 불가능하였고, 이러한 부당함은 대만 국민들의 분노와 불만을 불러일으켰고, 입법부에서 범죄수익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몰수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 논의가 되었음. 이런 이유로 대만에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법의 개혁이 이루어졌고, 범죄 몰수법은 왕 씨가 사망한 직후인 2016년에 시행됨. 그래서 2016년 현재 법적인 이유로 위반자가 기소되지 않거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독립적인 몰수대상 수익금을 별도로 선고할 수 있음. 또한 법이 개정된 후 제3자가 범죄수익을 고의로 수수하거나 증여한 경우에도 그 불법수익을 몰수함. 그래서 이 법은 법원이 한 사람의 가족이나 기업 계좌에 대한 불법적인 돈세탁을 몰수할 수 있게 해줌.

하지만 이 사례에서 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개정된 몰수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었음. 헌법재판소에 회부되어 2022년 12월에 판결이 났으며, 결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법이 합헌적이라는 것임. 합헌 결정의 이유로는 법적 소유권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몰수가 형사 조치가 아니라는 점(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되며, 몰수는 유죄판결이 필요 없고 피해자가 우선하며, 처벌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점. 새로운 법은 불법적인 소유권의 지속적인 상태에 대한 적용임). 범죄 수익을 유지하기 위한 기대는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

등이 이유임. 대만은 이번 사례에서 스위스와도 2001년부터 법적 지원을 받기 시작했고 파트너 국가들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지속적인 협력과 협상을 시작함. 대만은 이러한 국가들로부터 많은 증거를 받았고 관련 자산을 성공적으로 압류함. 대만은 다양한 노력으로 2019년과 2021년에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압수판결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었음. 사례에서 법원은 범죄 수익금으로 4억 8천 7백만 달러의 몰수를 판결함.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세계적인 것이며 국경을 넘는 범죄 당국에 대한 영토나 관할권이 없으며, 조정과 협력을 통해서만 사법권이 범죄자를 능가할 수 있음. 이러한 곤경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조합해야 하며 최신 법률이 필요하고, 효과적인 기소와 판결의 엄격하고 시기적절한 집행과 선진적인 법률 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괄적인 국제 협력이 필요함

❍ 한국(국민권익위) 참가자 활동

- 세션별 각국의 참가자에게 한국(국민권익위)의 반부패 활동에 대해 홍보하고 각국의 반부패 조직, 활동 사항 등에 대해 공유함

  * 각국 주요 면담자 : 대만 법무부 염정서 반부패 기획과장 Sam Sun, 대만 법무부 국제협력과장 David C.H. Lee, 대만 법무부 조사국 Catherine Liu, 대만 외교부 Sylvie Hsiao, 호주 연방경찰 Matt Stocks, 캐나다 홍콩영사관 Rizwan Ahmad, 인도네시아 대만무역대표부 Kus Fiandar Yusuf)

- 대만 법무부(염정서) 관계자는 ‘한국의 청렴도 평가’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고, 우리 측도 다국적 협력의 일환으로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

Ⅴ. 워크숍 총평

❍ 국내외 반부패 전문가이 참여하여 각 연사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반부패 활동의 전모에 대한 견해를 공유

①반부패 협력 분야에서는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델리아 페레이라 루비오 (Delia Ferreira Rubio) 회장은 당면한 부패 양태의 부단한 진화, 정부 정보의 공개 중요성, 신뢰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 당면한 도전에 대응함으로써 21 세기의 사법 상호지원 절차와 시대변화에 따른 혁신을 희망

② “국제연합 반부패공약”의 요구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공공-민간 협력 및 지역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거버넌스 모델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점을 공유

③“자금 세탁 방지 및 뇌물 수수 및 횡령 수익금 몰수를 통한 부패 퇴치”, “법 집행 기관의 기술능력을 이용한 부패 방지” 등 중요의제에 대해 광범위한 토론

❍ 부패는 더 이상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인 현상으로, 이는 반부패 노력의 변화를 촉발하여 민관 협력, 교차 협력, 국제 연계 전략으로 전환해야 함

❍ 부패와 싸우는 집행기관들은 국경 밖의 부패관행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국적 협력과 기술지원이 필요함

별첨	워크숍 관련 사진

워크숍 오프닝 행사

워크숍 패널 토론

워크숍 세션

워크숍 세션

워크숍 세션

외교부 만찬 참석